

☪ 교육·공공 기관

불법 SW 일제 단속

정보통신부는 검찰 등과 합동으로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교육 기관과 정부 투자 기관 등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8월 24일 밝혔다. 특히 교육 기관들에 대해서는 SW 장래 수요 계층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품 SW 사용 마인드를 높여 향후 불법 복제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 및 단속반은 정통부, 체신청, 검찰, 행자부 및 자치단체 진산 담당 직원, 유관 부처 등으로 각 지역별로 구성된다. 합동 단속 결과는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해 시정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 부산 지법, '성적 기준 학과 배정은 타당' 판결

부산 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동기 부장 판사)는 8월 25일 K군(20)과 P군(20)등 부산대 공대 도시공학과 학생 13명이 자신들의 희망과는 다른 학과에 배정됐으며 부산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학과 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평등한 경쟁 조건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측이 일방적

으로 도시공학과 배정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대학측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특정 학과 지원자가 많이 몰릴 경우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자를 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점 관리에 유의하라고 교육을 시켰고, 다른 기준이 공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점은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학과 배정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측의 처분은 재량을 넘어선 것이 아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과군제를 채택한 전국의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성적에 의한 학과 배정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점, 피고 대학측이 원하지 않은 학과에 배정 받은 학생들을 위해 복수 전공이나 제2전공, 부전공 등의 다양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99년도 대입 시험에서 부산대 공대 건축·도시공학과군에 합격한 K군 등 원고들은 올해 학과 배정 때 건축공학과를 지원했으나 성적을 기준으로 학과 배정을 한 대학측의 처분에 따라 탈락하자 이에 불복, 소송을 냈었다.

☪ 교육부, 제2외국어의

활성화 종합 방안 발표

교육부는 9월 28일 '제2외국어의 활성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

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제2외국어 교과 개설은 학생들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담당 교사의 비율에 따라 독어와 불어는 너무 많고 일본어와 중국어 등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2외국어는 2001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부터 선택 과목으로 채택돼 서울대 등 34개 대학 입시 전형에 반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제2외국어는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 중에서 학생이 선택하도록 돼 있어 학생들의 희망에 따른 과목 선택은 쉽지 않아 적지 않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있었다. 특히 일본어와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려는 학생들에 비해 일본어와 중국어 담당 교사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인문계 고교생들이 제2외국어를 선택해 배우는 비율은 독어가 35.7%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일본어(31.0%), 불어(22.4%), 중국어(9.1%), 서반어(1.4%), 러시아어(0.4%) 순이다. 이 안에 따르면 고교생들이 희망하는 제2외국어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과원 교사'가 원하는 대로 일본·중국·에스파냐어를 복수 전공하도록 했다.

연수 교사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맡지 않고 교육대나 일반대의 사범대에서 1년 동안 복수 전공 교육 과정을 이수, 60학점을 취

득해야 한다. 대학 3·4학년 교육 과정을 1년으로 압축해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교사들의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은 방과후나 방학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형식에 그쳐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다 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교육부는 최근 기획예산처와 협의, 연수 지원비 28억 원과 기간제 교사 채용비 13억 원 등 4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제2외 국어를 부전공한 교사 660명에 대해서는 보충 교육을 통해 오는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담 교사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 **교육부, 대학간**

학점 교류폭 확대 예정

교육부는 9월 8일 대학간의 경쟁력 강화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국내외 대학간의 학점 교류 인정 폭이 졸업 학점을 기준으로 현행 4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확대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B대학이 학점 교류 협정을 맺었다면 A대학에서 2년 동안 70학점을 딴 뒤 나머지 70학점을 B대학에 다니면서 취득하면 두 대학에서 동시에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공동학위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대학끼리는 물론 외국 대학과 학점 교류 협정을 맺었다더라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까지만 인정, 학생들의 교류 대학의 연수 및 수강을 꺼려왔다. 학위도 입학한 대학에서만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대와 교육 대학에는 전문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산업대의 경우 철도기술대학원, 교육대는 교장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행정 전문대학원 등이 설치된다.

☞ **교육부, 2001학년도 교육대 및 사범계 대학 입학 정원 확정**

교육부는 9월 5일 전국 85개 교대와 사범계 대학(교대 11개, 사범계 대학 74개)의 2001학년도 입학 정원을 올해보다 104명 늘어난 2만 1,338명으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해 호서대, 목포가톨릭대, 침례신대, 천안대, 경기대, 건국대 충주 캠퍼스에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거나 증원해 예비 유치원 교사 정원을 올해보다 110명 늘어난 4,95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11개 교대 정원은 동결하되, 법 개정을 통해 학사 편입생 정원을 현재 신입생 정원의 5%에서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등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 정원은 서울대, 이화여대, 대구대, 고려대 등 두뇌 한국(BK) 21 관련 학과 26명, 충남대 공업교육 학과가 일반 계열인 정보통신학 부로 전환해 20명 등 모두 46명

■ 2001년 학교급별 교원 양성 정원 ■

구 분	정 원	증 원	증원 내용
유치원	4,954	110	호서대(20명), 목포가톨릭대(20명), 경기대(20명), 침례신학대(10명), 천안대(20명), 건국대(20명)
초 등	4,954	0	
중 등	10,699	-46	충남대(-20명), 서울대(-5명), 대구대(-10명), 이화여대(-10명), 고려대(-1명)
특수 학교	749	40	천안대(20명), 나사렛대(20명)

이 감축된다.

☪ **교육부, '국립대 등록금
심의위' 구성 논란**

교육부는 9월 17일 국립대와 교육대, 산업대 등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책정할 때 소비자 대표의 경영·회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국립대 수업료 및 입학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이달 중 위원회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기름 값 인상 등에 따른 물가 불안과 지나친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등록금 책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도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 관계자 및 학생들은 "대학측이 정부가 손댈 수 없는 기성회비를 대폭 인상하면 등록금은 오르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립대 등록금은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등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정부가 확정·고시할 수 있는 부분은 수업료와 입학금 두 가지뿐. 기성회비는 학교 자율로 책정토록 돼 있어 정부가 올려라 내려라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올해 국립대 등록금의 경우도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대 등 각 대학이

기성회비를 20% 가까이 올리는 방식을 동원, 실제 등록금은 연간 231만 7,000원(전학년·계열 평균) 수준으로 평균 6.7% 인상된 바 있다.

☪ **교육부, '대학 학부제'
2002년 도입 난항**

교육부가 추진 중인 2002학년도 학부제 전면 실시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9월 19일 서울 각 대학들에 따르면 서울대 인문대는 2002학년도에 철학, 종교학, 미학과 등 7개 학과를 단일 학부로 합치되 8개 어학 계열 학과의 경우 어문학 특성상 과별 모집을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범대도 체육교육과 등 대다수 학과가 전공자를 조기에 뽑아 교육해야 한다며 단일 학부 모집에 난색을 표하고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중앙대도 지난달 말 교육부에 제출한 정원 조정안에서 단일 학부로 뽑던 문과대를 다시 학과별 모집으로 건의했으며, 기존 학부제로 운영하던 생활대도 3개 학과로 분할 모집키로 했다. 모집 단위 광역화와 학부제를 주도했던 연세대도 2002학년도부터 4개 계열로 뽑기로 했으나 광역화 범위를 축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두뇌 한국(BK)21' 지원 조건으로 모집 단위 광역화를 추진했던 교육부가 최근 대학의 반

발에 부딪혀 인문 계열에 대해 30% 이내로 학과별 모집 허용을 시사한 것도 학부제를 후퇴하게 한 원인이라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중앙대 한 관계자는 "교수들은 표면상 '기초 학문 소외'를 이유로 학부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소속 교수들의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한 측면도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 대학들은 기획예산처의 학부제 도입 요구와 이에 맞물린 예산 지원 때문에 학부제 도입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연세대 한 관계자는 "기획예산처가 대학 개혁 지원, '두뇌한국21' 등 각종 지원 계획에서 학부제를 요구하고 있어 교수나 학생들의 요구만 받아들일 수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 **교육부, 학교 기부금
전액 소득 공제 예정**

교육부는 9월 21일 내년부터 개인이 사립 초·중등 학교와 대학교에 기부금을 내면 전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학교 법인이 토지 등 기본 재산을 팔아서 교육에 사용할 경우 특별 부가세 면제 시한이 3년간 연장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재정경제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인이 사립 학교에 기부금을 낼 경우 현재 소득의 10%만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국·공립 학교와 같이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로 기간이 만료되는 학교 법인 토지 양도 특별 부가세 면제 특례 조항을 2003년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학 법인이 특정 법인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도 교육부 장관이 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학교 법인이 재원 확보를 위해 100% 출자해 특정 수익 사업을 할 경우 주식 보유 한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 중앙인사위,

고시 제도 개편안 발표

오는 2003년부터는 행정 고시, 지방 고시 등의 국가 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하면 그 해에만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2003년부터 국가 고시 1차 시험에 행정·지방 고시의 경우 헌법을, 기술 고시의 경우에는 직군에 따라 물리학개론, 생물학개론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인사위원회는 9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 고시 제도 개편안'을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이에 앞서 9월 22일~23일 각 부처 인사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이번 개편안을 전달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안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10월초에는 인사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중앙인사위는 행시와 지방 고시의 경우 1차 시험에 합격할 경우 다음해까지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현행 방식을 바꿔 1차 시험의 합격 유효 기간을 해당 연도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1차 시험 합격자들은 그해 2차 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므로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새로운 고시 제도의 1차 시험인 공직 적격성 테스트(PSAT)는 크게 기본 소양 분야와 직무 관련 지식 분야로 나뉜다. 기본 소양 분야는 언어·논리 능력, 통계 및 자료 해석 능력, 상황 판단 능력 등 3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직무 관련 지식 분야에서는 국가 고시에 따라 과목을 별도로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행정·외무 고시는 헌법, 기술 고시 광공업직군은 물리학개론, 농림수산직군은 생물학개론, 환경직군은 화학개론 등이 유력하다. 현재 행시·외시의 경우 1차 시험에 헌법이 포함돼 있지만 당초의 개편안에는 헌법이 제외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영어 시험의 경우 토익, 토플, 텡스뿐만 아니라 CeLP(한국외국어·사무 서비스 자격 평가

원 시행), FLEX(한국외국어대학 검정 시험), G-TELP, IELTS(주한영국문화원 시행) 등 국내에서 응시 가능한 시험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 행자부, 국립대 교수

내년 정원 동결

내년도 일반 대학·교육대·산업대·전문대 등 전국 51개 국립 대학의 교수 정원이 전면 동결된다. 교육부는 9월 25일 국립 대학 교수의 증원과 관련, 행정자치부로부터 증원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 동안 24개 대학, 11개 교육대, 8개 산업대, 방송통신대, 7개 전문대 등 51개 국립 대학의 교수 516명을 늘리기 위해 행자부와 협의를 해왔다. 행자부는 "현재 국립 대학의 교수 비율이 사립 대학보다 높은데다 정부의 구조 조정과 맞물려 다른 직종의 증원을 불허하는 상태에서 교수 정원만 늘릴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립 대학으로부터 교수 2,663명, 조교 1,015명 등 모두 3,678명의 증원 요청을 받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수 증원은 교수 확보율 65%에 맞춰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실제로는 법으로 정한 교수 숫자에 턱없이 모자란다."고 말했다.

☞ **교육부, 2001년 고등 교육 예산안 발표**

교육부는 9월 26일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 2001년도 교육 예산안 규모를 전체의 23.3%인 23조 5,538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4.53% 수준이다.

☞ **교육부, 지방대 육성 대책안 발표**

교육부가 9월 28일 발표한 지방대 육성 대책안은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교육 지책이다. 한 마디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하는 지방대에 대해

서는 정부가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1월 말 발표되며, 이 내용은 '지방 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담게 된다. 정부는 이 법에 근거해 관련 부처 차관, 지방 자치 단체장, 산업체 대표, 지방대 총장 등으로 '지방대 육성 위원회'를 구성, 범 사회적 차원의 지방대 지원과 지방대생 취업 촉진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지방대는 신입생 감소와 재학생 이탈로 현재 법정 정원의 87.7% 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도산'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백화점식 학과 운영을 지양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토록 하기 위해 다른 대학과 학과간 통폐합을 추진하는 지방대에 대해서는 재정·행정상의 지원을 극대화한다. 교육부는 국립 대학은 내년부터, 사립 대학은 2002년부터 여러 대학이 협의체를 구성해 자구 계획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지방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 고교 출신으로 해당 지

■ 2001년도 고등 교육 관련 정부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항 목		금 액
대학 교육의 경쟁력 제고	연구 중심 대학원 육성	170,000
	대학 구조 조정 및 개혁 추진 유도	60,000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63,000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및 교육 개혁 추진 평가	950
연구 능력 활성화를 위한 R&D 사업	학술 연구 조성비	130,000
	백신 연구소 지원	9,670
	Post-Doc 전문 인력 양성	8,000
	이·공계 대학 연구소 기자재 지원	15,000
	국립대 교원 연구비 보조	29,735
대학 교육의 내실화	국·공·사립대 시설·설비 확충	165,300
	사학진흥기금 지원(계특)	50,000
	교육 차관 원리금 상환	100,917
	교문서 보존과 국역	2,856
	대학생 해외 봉사단 지원	300
국립 대학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국립대 시설	359,792
	국립대 운영 지원	28,960
총 계		1,194,480

역 대학 입학자 중 정원의 1% 정도 범위에서 해당 지역에서 대학원 과정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6년간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매년 2,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지방대 졸업생을 위한 국비 유학 프로그램을 신설, 석·박사 과정 4년 정도의 유학비를 지원하고, '97년 폐지된 지방대 교수 연구 지원 사업을 부활시켜 연구비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올 연말까지 지역별 전략 산업을 선정, 지역 특화 사업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부산이 소프트웨어, 항만·물류 산업 중심지로 선정되면 각종 기업과 연구소가 이쪽으로 이주하고 정부가 지원을 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이 계획에 맞춰 지방대가 해당 지역의 특성화 산업에 부응하는 쪽으로 학과 통폐합 등 구조 조정을 할 경우 재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실정에 맞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종 강좌를 개설할 경우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 정통부, '2002년까지 IT 인력 양성에 600억 원 지원'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9월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전국 대학교 총장 36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정보 기술(IT) 관련 학과 정원 확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전 산업에서 필요한 IT인력이 연 6.6%씩 성장해 오는 2004년에는 총 1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하지만 공급 인력은 산업체 요구를 수용하지 못해 2004년까지 총 21만 명, 특히 석·박사 고급 인력이 약 2만 5,000명 부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어 "IT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 통신 관련 학과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계획을 수립, 2002년까지 총 6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고급 IT 기술 인력의 해외 유학을 돕기 위한 지원 규모도 현재 60명 15억 원에서 2005년 440명 1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와 함께 각 대학들이 정보 통신 관련 학과를 신

설하거나 학생 수를 늘리고, 학·연·산 공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줄 것을 대학 총장들에게 요청했다.

☞ '두뇌한국 21' 사업 추진 1차년도 평가결과 발표

교육부는 9월 29일 '두뇌 한국 21' 사업 추진 1차 년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대상은 과학 기술 분야, 인문 사회 분야, 지역 대학 육성 분야, 특화 분야 및 핵심 분야 등 총 439개 사업단이고, 7개년 사업 추진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 체제 정착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시행하였다.

그 성과를 살펴보면, BK 사업 추진 1년이 경과한 현재 과학 기술 분야의 경우 BK 사업 시행 전 3년간 평균치보다 SCI급 논문 게재 실적이 3,842편에서 4,545편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교수 1인당 논문 수도 2.74편에서 3.24편으로 크게 증가되었다. 국제 특허 취득 현황도 111건에서 145건으로 크게 증가되어 BK 사업 추진

■ 법정 정원 대비 재학생 비율 분포 ■

(2000. 4. 1 기준)

구 분	50% 미만	50% -	60% -	70% -	80% -	90% -	100% -	계
수도권 대학	국·공립	-	-	-	-	2	4	6
	사립	-	6	1	2	10	28	63
	계	-	6	1	2	10	30	69
지방 대학	국·공립	-	-	-	-	8	20	28
	사립	11	6	9	11	21	22	83
	계	11	6	9	11	29	42	111

이 연구 업적 성취에 자극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박사 후 과정생이나 계약 교수 등 신진 연구인력 채용 활용에 있어서도 879명을 채용하여 대학원 연구력 제고를 위하여 많은 우수 인력이 연구 및 교육 활동에 동참하게 되었고, 대학원생 지원 부분에서는 석사 7,564명 박사 4,040명에 대하여 RA/TA 경비를 지원하여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1,500억 원(대학원 전용 시설비 500억 원 제외)을 지원하는 대학원 중심 대학 육성 사업에 대하여 ▶ 과학 기술 분야를 IT 분야·BIO 분야 등 총 12개 분야로 나누어 그룹별 상대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우수 사업단에 대하여 국고 사업비의 최대 30% 증액과 부진 사업단에 최대 20%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고, ▶ 인문 사회 분야는 인문 과학 및 사회 과학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여 우수 사업단에 최대 사업비의 10% 증액과 부진 사업단에 최대 10% 삭감하게 되었으며, ▶ 지역 대학 육성 분야는 정보 통신 분야 등 총 3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우수 사업단에 최대 사업비의 17% 증액과 부진 사업단에 최대 15% 삭감하여 차등 지원하게 되었다.

연간 495억 원을 지원하는 대학원 연구력 제고 사업에 있어서

특화 분야 우수 사업단 사업비를 최대 4% 증액과 부진 사업단에 최대 5% 삭감하여 국고를 차등 지원하면서, 대응 자금 미확보 분은 국고 지원시 삭감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매년 2,000억 원의 방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단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 두뇌 한국 21 사업 지원부를 상설 기구화하여 사업단을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할 계획이다.

☾ 사립 대학 '본고사' 부활 조짐

10월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규제 개혁위가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입법 예고 중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본고사 금지 조항에 대해 "법으로 본고사를 금지하는 것은 대학의 선발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개정 작업을 보류토록 통보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보완해 규제 개혁위에 재차 심의를 의뢰키로 했으며,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처럼 행정 지도 방식을 통해 대학들이 본고사를 치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사립 대학들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에 부풀리기 돼 있고 수능시험이 갈수록 쉬워진다는 이유로 2002학년도부터 모집 단위별로 고교 학력 측정 형태의 지필 고사를 계획하고 있다.

지필 고사는 논술 고사와 국어·영어·수학 과목별 고사를 혼합한 형태여서 유사(類似) 본고사 성행 및 이에 따른 수험생들의 준비 부담 등이 우려된다.

한편 대학별 본고사는 '97학년도 이후 고교 교육 정상화와 과의 역제를 위해 국·공립 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논술 고사를 제외하고 전면 금지됐다. 반면 사립 대학은 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사실상 자유롭게 치를 수 있었지만 교육부가 행정 지도로 막아 왔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수험생의 기초적인 수학적능력을 측정하는 평가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대학들이 교과목 위주로 본고사를 치를 경우 법이든 행정 지도든 막겠다."고 밝혔다.

☾ 교육부, '학위 종류 및 표기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

교육부는 10월 2일 석사 27종, 박사 21종으로 제한된 학위의 종류를 대학별로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학위의 종류 및 표기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제정, 내년 2월 학위 수여식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학위 종류 제한에 묶여 물리·화학 분야와 함께 '이학 박사'로 불렸던 무용·체육 전공자들은 무용학 박사, 체육학 박사로 표기된 학위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운 학문 분야인 문헌정보학 등도 독자

적인 학위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전문 학위에 대해서는 표기 방법을 놓고 논란이 많아 대학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위 표기의 자율화는 대학에서 교수를 채용할 때 전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지는 취지"라며, "전문 학위의 경우 일반 학위와 구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 학위는 '교육학 박사(교육 행정)', '경영학 석사(회계학)' 등으로 표기하거나 '교육 행정학 전문 석사', '회계학 전문 박사'로 표기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 교육부, 교육 행정 정보망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방침

교육부는 10월 8일 교육 행정 정보망 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 1,934개 고교 담임 교사 및 과목 담당 교사가 전체 학생의 학생부 성적을 중간, 학기말 고사 등 시험을 볼 때마다 평소 봉사 활동, 특기 등과 함께 교육부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학교가 연결된 '학교 종합 정보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교육부가 이를 일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 입학 시정서 필요한 학생부 성적은 각 고교에서 해당 학생

의 3년치 성적이 기록된 성적표를 '학교 생활 프로그램'이라는 컴퓨터 CD롬에 담은 다음 지원 대학에 제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담합해 고의적으로 성적을 올려 주거나 성적 누락 실수 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현장 교육을 감독하는 관할 교육관청과 학교간의 첨단 정보망이 없어 일선 학교에서 성적 입력 오류나 성적 올려 주기가 이뤄지더라도 제대로 감시할 수 없었다."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각 학교를 수시로 감사, 성적 조작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2학년도 대입부터 학교 종합 정보 관리 시스템을 각 대학에 제공, 학생이 직접 학생부 성적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대학 측이 이 시스템을 통해 입학 사정시 필요한 자료를 얻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고교 1·2학년생 150여 만 명의 학생부 성적을 이 시스템에 입력하라고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고교에 지시한 바 있다.

☞ 대입 추천서 양식 연내 통일

2002학년도부터 대학마다 다른 대학 입시 고교장 추천서의 양식이 통일될 전망이다. 이는 고교장 추천서의 양식이 상이해 고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수험생들이 직접 고교장 추천서를 쓰는 등 부

작용이 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0월 8일 교육부와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 지역 입학 관련 처장 협의회와 국·공립 대학 교무 처장 협의회 등은 주요 대학의 고교장 추천서 양식을 취합, 단일한 양식을 만들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대 입시 관리 센터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지역 대학의 추천서 양식을 수집해 표현 방식, 기입 사항 등을 통일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 권두환 교무 처장은 "대학들이 80~90% 정도는 대개 비슷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 일부 조정만 하면 양식을 통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모집 단위별 특성에 따라 다소 변화를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권 처장은 또 "고교가 학생 개개인에 대한 파일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작성 가능한 양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2002년 입시 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해 발표하고 추천서 양식도 통일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부, 2001학년도

산업 대학 정원 발표

교육부는 10월 11일 전국 산업 대학의 2001학년도 학생 정원 조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19개 산업 대학 중 3개 대학에서 460명을 증원 신청하고, 2개

대학에서 810명을 감원 신청하였으나, 지방 사립 대학 중 정원 자율화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만 270명 증원을 허용하고, 810명 감원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2001학년도 산업 대학 입학 정원은 2000학년도에 비해 540명이 감원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그 동안 2000년까지는 산업 대학의 입학 정원이 증가가 둔화('99년 1,685명, 2000년 180명)되는 추세였으나, 2001학년도에는 지방 사립 대학이 입학 자원 감소 등에 따른 구조 조정 차원에서 과감한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함으로써 처음으로 산업 대학의 정원이 순수하게 540명이 감축되었다. 향후 교육부는 정원 조정 결과를 개별 대학에 통보하여 대학이 자체적으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재조정할 기회를 부여한 후 대학으로부터 2001학년도 정원 조정 최종 결과를 제출 받아 10월 중에 최종 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별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은 한국 대학교육협의회의 모집 요강 집계시 도표로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청, '기술 지도 대학' 사업 확대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이 정부·대학·중소 기업간 삼각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기술 지도

대학"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사업의 내년 예산을 3백 80억 원 확보, 각 대학에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10월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80% 늘어난 것이다.

기술 지도 대학으로 새로 1백 개 대학을 선정, 약 1천 5백개 중소기업들이 현장 기술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대학에 기술 지도비를 지원하면 이 돈으로 대학이 중소기업 지도하게 된다. 중기청은 지금까지 기술 지도 대학들이 기술 지도 사업만 해 왔으나 앞으로는 업계 공동 애로 기술 조사와 선진국 기술 지도, 정보 조사 사업 등도 벌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영우 중기청 기술 지원 국장은 "이 사업은 대학에서 잠자던 기술을 깨워 사업화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기술 지도 인력을 양성하는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는 사업 공고, 기술 지도 대학 지정, 지원 대상 업체 선정, 기술 지도 교수 선정, 현장 기술 지원, 우수 사례 발표 및 포상 등으로 이뤄진다.

☞ 지방 교육세 내년 신설

행정자치부는 10월 13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소비 세액이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상되고 경주(競走)·마권(馬券) 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인상하여, 지방교육세에 포함했다. 담배 소비세와 경주·마권 세율의 인상으로 소비자는 연간 약 2,0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신설되는 지방 교육세에 포함되는 세목은 △등록세(표준 세율이 100분의 20) △주민균등할의 세(100분의 10, 단, 인구 50만 이상인 시는 100분의 25) △자동차세(100분의 30) △재산세(100분의 20) △종합토지세(100분의 20) 등이다. 이들 세금은 현재 국세인 교육세에 과세돼 시행되고 있는 항목이다. 정부는 지방 교육세로 전환하는 총 세수를 약 3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 교육세 신설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지방 자치 단체가 교육 재정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교육 재정을 국세에서 충당하다가 부담하는 주체가 지방 자치 단체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방 교육세가 신설돼도 일부 세율 조정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 대입 특별 전형 보완 시급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새천년 민주당 설훈 의원은 10월 11일 국정 감사를 맞아 내놓은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서울 소재 24개 대학의 각종 경시 대회 및 올림피아드 대회 입상자, 어학 특기자를 대상으로 한 특기자 특별 전형을 분석한 결과 특기와 관련 없는 학부(과)에 입학한 학생이 상당수였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4개 대학 중 20개 대학이 1천 67명의 특기자를 선발했으나 이들 학교 중 특기별로 모집 단위를 제한한 학교는 5개 학교에 불과했다. 모집 단위 제한이 없는 15개 대학에 입학한 경시 대회 및 올림피아드 입상자, 어학 특기자 933명 중 39.8%에 해당하는 372명이 자신의 수상 경력이나 특기와는 무관한 학과에 입학했다.

설 의원은 "수학 경시 대회에 입상한 특기자가 법대에, 영어 특기자가 의예과에 진학하는 것은 특기자 전형의 원래 취지와 어긋난다."면서 "특기와 무관한 과에 진학하려면 일반 전형으로 입학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이런 특기자 특별 전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기별로 모집 단위를 제한하고 특기자 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의 인사가 참여하

는 '특기자 전형 심사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부, 고졸 유학생 100명 선발 日本 공대 파견

교육부는 내년에 일본 공과대학에 파견할 고졸(17세 이상 19세 미만) 유학생 100명을 선발했다고 10월 17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경희대학에서 국내 예비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일본 문부성에서 주관한 일본 대학 배치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로 도쿄 대학, 오사카 대학, 고베 대학 등 일본 내 23개 국립 공과대학에 내년 4월 입학한다. 이에 앞서 이들은 이 달 하순부터 입학 예정 대학에서 6개월간 현지 연수를 받게 되며, 내년 4월 입학하면 4년 후 학부 과정을 마칠 때까지 입학금·등록금은 물론 매월 14만 2,500엔(약 150만 원)의 생활비와 항공료까지 지원 받는다.

☪ 민교협, 교수 노조 설립 입법 청원

민교협 최갑수 상임 공동 의장(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수들의 교권 수호와 신분 보장을 위해 민교협 내에 '교수노조추진기확단'을 오는 10월 20일께 발족하고, 연내 노조 준비위 결성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5월까지

교수 노동 조합을 출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교협은 교수 노조의 활동 방향과 관련 ▲교육부 개혁, 사립 대학 공공성 강화, 대학의 민주적 구조 개편 ▲교수 업적 평가제 및 인사 제도 쇄신, 교육 재정 확보 ▲시간 강사 공급 구조 개혁과 교수 요원 확충 방안 마련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 교육 강화를 내걸었다.

민교협은 현행 국가 공무원법, 지방 공무원법, 사립 학교법은 극소수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는 노동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 입법 청원을 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각계 대표들과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 한·불 양국,

ASEM 장학 사업 추진

ASEM 장학 사업은 올해 초 교육부와 프랑스 정부가 아시아와 유럽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문화·학술 교류를 대폭 확대하자는데 의견을 모으면서 이번 ASEM의 정식 의제로까지 선정됐다. 우리 나라와 프랑스는 2,500만 유로(약 300억 원)의 장학 기금 조성을 추진, 5년간에 걸쳐 아시아와 유럽의 학생·교수·연구원 교류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두 나라가 500만 유로

씩을 기금에 출연할 예정이다. 교류 대상자에는 대학생·교수뿐 아니라 초·중등 교원들도 포함된다. 양측은 장학 사업 사무국을 서울에 설치하고 대상자 선정 방식, 교류 기간, 1인당 지원금 등 세부 사항까지 이미 마련했다.

교류 기간 1년 이하의 대학생은 등록금, 기숙사 제공과는 별도로 1인당 1개월에 1,000유로(약 120만 원)를, 교사나 교수는 최대한 6개월 교류 기간 중 한 달에 3,000유로(약 360만 원)를 지원받는다. 참여 회원국 위원들로 구성된 사무국 심사 위원회에서 선발하며, 반드시 두 지역 각 1명씩 평등하게 교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간 별도의 학점 인정 및 학위 인정 교류 협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교류 기간 취득한 학점을 상호 대학 모두 인정하도록 했다. 이미 26개 회원국 중 12개국이 이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아직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은 일본·이탈리아·스페

인 등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 법·의학 전문대학원 도입 1년 연기

교육부는 10월 22일 지난 7월 대통령 자문 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2002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법·의학 전문대학원 도입 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대학에 '법·의학 전문대학원 도입 시기 조정 통보'라는 공문을 보내 "촉박한 2002학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하고 새 제도의 도입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 교육부에 법학 교육위원회, 의학 교육 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입 제도가 대폭 변경되고 모집 단위가 광역화되는 2002학년도 입시에서도 대학들이 종전과 같이 학부 모집 단위로 법학과나 의예과를 둘 수 있게 됐다.

☾ 교육부, 국립 대학여교수 보직 2005년까지 20%로 확대

교육부는 10월 25일 2001년부터 향후 5년 후 여성 참여율이 20% 이상 되도록 하기 위한 지침을 확대·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교수 임용시 성별에 따른 불리함을 개선하고, 대학 내 주요 임명직 행정 보직에 대학별 남녀 교수 비율을 반영하여 보직 여성 교수 참여율이 전체 교수 대비 여성 교수 비율 및 대학 본부 인사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 구성시 여성 교수 참여율이 20% 이상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02년부터 대학별 연차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국립대 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재정 지원과 연계시키기로 하고, 평가 결과를 전국 고등학교 여학생 진학 지도시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며, 우수 대학에 대해서는 여성·교육 관련 민간 단체 등에서 「양성 평등 우수 대학」으로 상(Award)을 수여하는 등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